

보도시점 2025. 9. 4.(목) 배포시 배포 2025. 9. 4.(목) 10시

2026년 재외동포청 예산안 1,092억원 편성

- 「해외 동포청년 국내 유치·정착 지원」 신규사업 본격 추진
- 사할린·입양 동포 예산 이관, 동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

□ 2026년도 재외동포청 예산안이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.

- 2026년 동포청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1,092억으로, 올해 본 예산 1,071억원 대비, 약 2%(21억원) 증가됐다.

※ 【동포청 예산 추이】 ('24) 1,067 → ('25) 1,071 → ('26안) 1,092억원

- 이번 예산은 정부의 재정 효율화 기조에 따라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, 절감된 재원을 핵심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한 결과다.

□ 2026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.

① 「해외 동포청년 유치·정착 지원 사업」 신규 추진(31억원)

-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해외 동포청년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.
- 2026년 사업 첫해 예산은 31억 원으로, 해외 체류 재외동포 중 국내 학업 및 취업·정착을 희망하는 동포 대학(원)생과 취업 준비생을 선발해, ▲대학(원)생 대상 장학금, ▲취업 준비생 대상 취업 교육·훈련비 등을 지원한다.
- 이는 국내 저출생·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국가 인재정책 대상을 차세대 동포로 특정하여 확대한 첫 사례로, 해외 동포청년을 대한민국 발전의 전략적 동반자로 육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

② 사할린·입양동포 지원 예산 이관(78억원)

- 그동안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예산을 2026년부터 동포청으로 이관하여 사업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추진한다.

- ‘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(77억 원)’은 일제 강제징용 및 남북분단 상황으로 귀환하지 못한 사할린 한인들이 모국으로 영주 귀국 시 정착비 및 입소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
- ‘입양동포 단체 지원(1억 원) 사업’은 국내에 체류 중이거나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입양동포 및 자녀를 대상으로 국내 정착 교육을 지원한다.
- 이번 예산 이관은 재외동포의 역사적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국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이다.
 - 특히, 부처별로 분산된 동포 관련 예산을 동포청으로 일원화한 첫 사례로서, 동포청의 동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.

③ 한인 정체성 함양(9억원 증액) 및 디지털 행정 기반 강화(27억원)

- 전 세계 한글학교 지원을 확대(9억원 증액, 총 195억원)하여, 한민족 정체성을 이어가고 차세대 동포의 한글·역사·문화 학습 기반을 강화한다.
- 또한, 「사이버 안보 업무규정」(대통령령)에 의거, 동포청 내에 보안관제 센터(신규, 27억 원)를 신설한다.
 - 이는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.

□ 정부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 심사와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.

- 동포청은 국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, 각 사업이 정책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.
- 특히, 해외 동포청년 유치·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, 국내동포 정착 지원과 해외 동포의 공공외교 활동 등을 확대 지원하여 재외동포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. /끝/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기획재정담당관실	책임자	과장	홍명화	032-585-3128
		담당자	사무관	방선희	032-585-3130